

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

2004. 1. 29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【목 차】

I. 왜 「신국토구상」인가?	/ 1
II. 대내외적 여건변화	/ 3
III. 신국토 비전	/ 9
IV. 신국토구상 5대 전략	/10
V.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간 연계발전	/30
VI. 신국토의 미래모습	/35
<부록> 신국토구상 5대 전략·7대 과제	/36

I

왜 「신국토구상」인가?

2020년을 겨냥한 미래 국토발전의 새로운 골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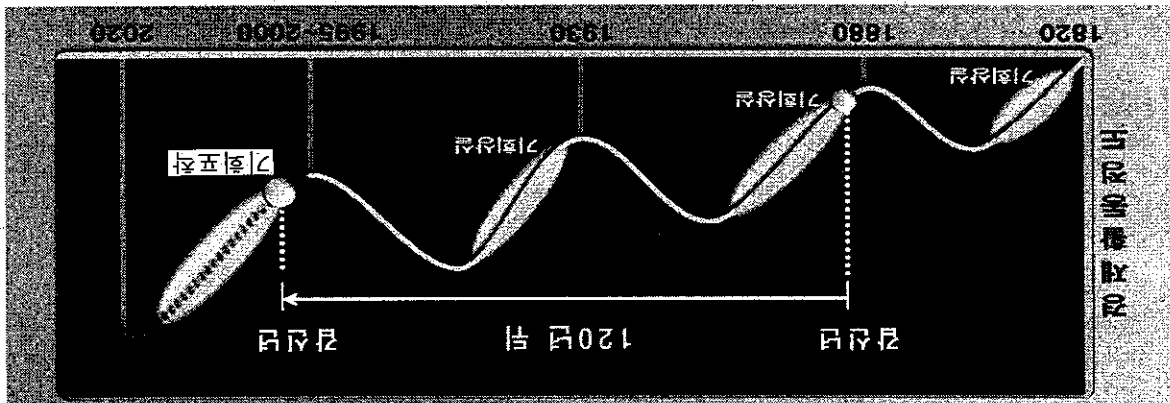
- ☐ 기존의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로는 세계화·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
- ☐ 그러나, **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**(국가균형발전특별법, 실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, 지방분권특별법) 제정을 계기로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**상생발전의 제도적 기반**이 구축됨
 - 과거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 시행 가능
- ☐ 아울러,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 **국가발전의 기회요인이** 성숙되고 있음
 - 무한경쟁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매머드급 경쟁국으로서의 중국 부상을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
- ☐ 그간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**한반도에 축적되는 잠재력을 살려가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** 필요
 - 국민소득 1만달러의 늪을 벗어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기 위한 **국토의 장기비전과 전략 마련**
- ☒ **실천가능한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결집**

☞ 우리나라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경제의 순환적 상승기를 제2의 도약기화로 활용

※ 중국은 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방화 이후 도약에 성공하고 있으며, 미국은 80년대 후반부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상승기 진입에 성공

- 국가정책의 부실, 정부에 대한 불신, 이념갈등, 사회적 대립 구조 등 「갈등과 대립」이 사회상설의 주원인
- 못하고 기회를 상실

□ 그동안 우리는 세계경제 상승기를 우리의 발전과 연결시키지



< 세계경제의 장기 사이클 >

- 2004년은 우리나라의 대변혁을 시도하였던 감성정변 후 120년째 되는 해로서 세계적 경제상승기의 출발점에 해당
- 세계경제에 대한 쿨드라티에프 주기에 의하면,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 제5기의 사이클(90년대~2040년)에 해당
- (Turning Point)으로서의 시대적 의미를 가짐

□ 2004년은 우리나라가 상승·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

◇ 2004년의 시대적 의미

II

대내외적 여건변화 :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

1. 세계적 변화 추이

□ 개별국가중심에서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변화

- 지금 세계는 정보화,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(世方化)의 시대를 맞고 있음
- 개별국가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EU, NAFTA 등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되어 교역·자본이동에 대한 국제장벽이 제거

□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변모

- 경제·사회·정치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과거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뀜

※ 「오마에 겐이치」는 미래 글로벌경제의 주체가 개별국가에서 세계경제의 거점지역이 되는 지역국가(region-state)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

□ 집권·단절형 사회에서 분권·네트워크형 사회로 변혁

- 중앙집권적인 통제형 사회구조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·주민과 보다 밀착된 분권형 사회구조로 이행
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부문간의 단절형 사회구조로부터 주체간 협력과 창조적 경쟁의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사회로 전환

□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기술혁신형 성장으로 전환

- 자본·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구도에서 탈피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로 전환

2. 동아시아의 발전 및 남북관계의 진전

□ 동아시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임

○ 동아시아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34%로 미국과 EU에 비해 훨씬 많고 경제규모는 현재 EU와 비슷한 수준

○ 동아시아는 2000년의 경제성장률이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

※ 아세안 5.3%(00년), 중국 8.0, 일본 2.4, 러시아 9.0, 한국 9.3, 미국 4.2, EU 3.5, 전세계 3.9

□ 더욱이, 아세안과 한·중·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규모는 향후 급격히 성장하여 2020년경에 전 세계의 29%에 이르러 미국의 20%, EU의 25%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

※ 지역별 경제 비중 전망('02→'20년, KIEP) : 동아시아(22%→29%), EU(19→25), 미국(31→20), 기타(28→26)

→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 지역의 금성자를 국내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지정학적 이점 보유

□ '00.6.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새로운 교류협력을 동북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○ 경의선 등 남북한 연계교동로망의 복원·확충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특구의 공동개발이 진해 중

→ 한반도가 대륙과 단절된 섬(isolated island)에서 동서남북으로 열린 개방형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 마련

3. 고속형 국토로의 전환

고속철도 개통, 국제공항과 항만 건설, 초고속 정보통신망
완비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확충

□ 고속철도 개통(2004.4.1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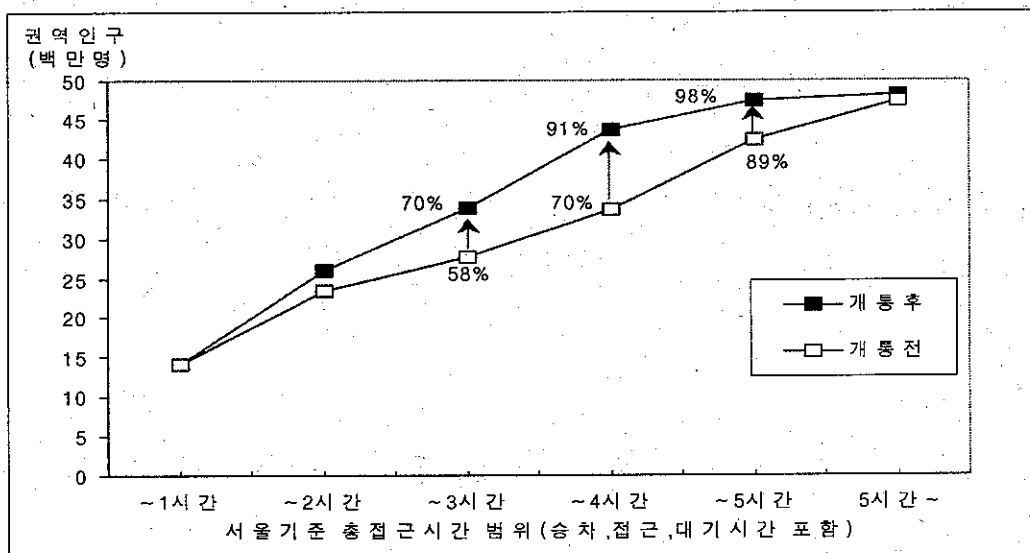
○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호남선 전철화를 통하여 운행시간이
크게 줄게 되어 **반나절 생활권이 가능**

- **경부고속철도 1단계** : 서울~대구 신선, 대구~부산 전철화
⇒ 서울~부산 : 새마을호 4시간 10분 → 2시간 40분
- **호남선 전철화** : 대전~목포 전철화(고속열차운행)
⇒ 서울~목포 : 새마을호 4시간 42분 → 2시간 58분

○ **교통혁명, 생활혁명**으로 업무 및 여가활동 공간이 확대

- 3시간내 서울 접근인구 증가(28백만명(58%)→34(70%))

< 고속열차 이용에 따른 접근가능 인구규모의 변화(서울기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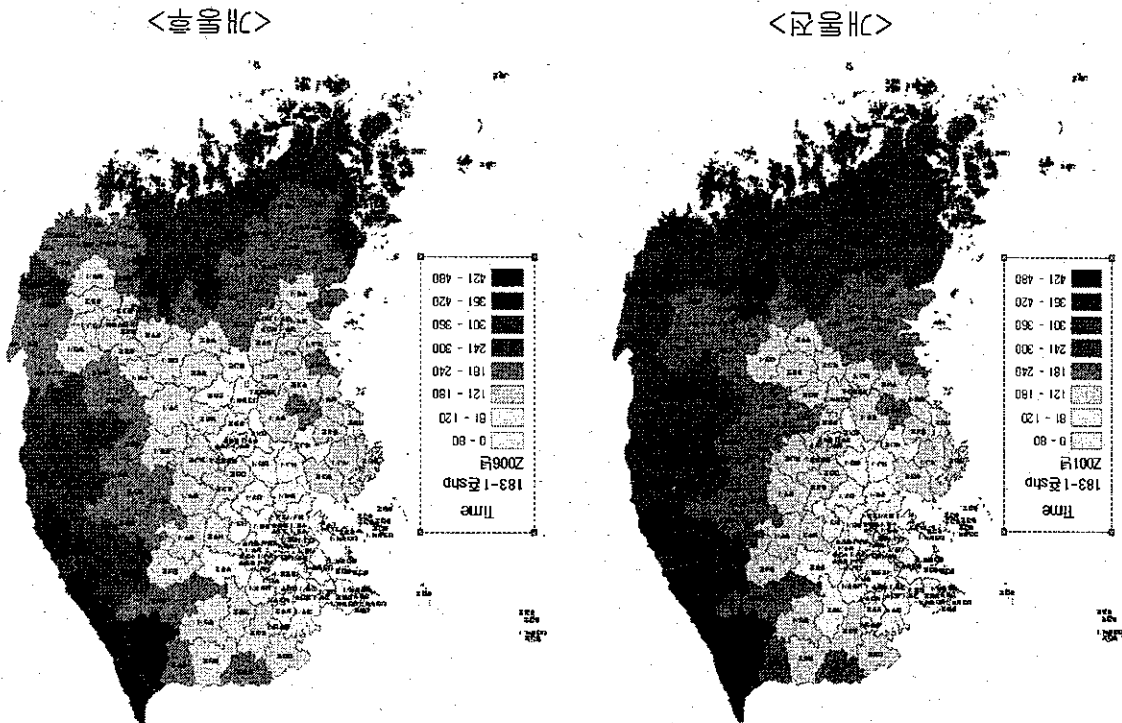


○ (철도) 철안-수원간을 전철화하고 동서교통망 확충을 위한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

○ (항만) 인천항 확장 및 인천북항 신설, 부산신항 신설 및 관양항·평택항 확장을 통해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

○ (국제공항)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인천 공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

□ 공항, 항만, 철도 등 세계수준의 SOC 및 물류체계 확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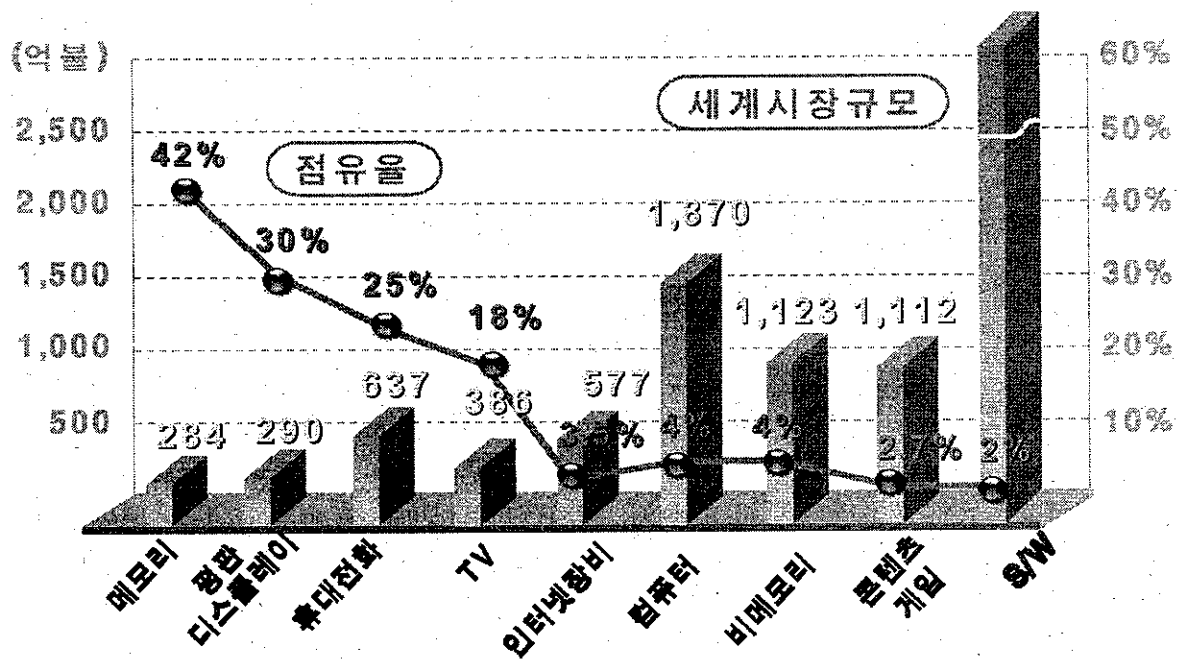
< 고속철도 건설 후의 접근성 변화 >

○ 고속철 정차도시와 주변지역이 기업활동 및 교육·문화·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

□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시·공간 압축

- (산업측면) IT산업은 GDP의 14.9%('02), 경제성장의 38%, 무역흑자의 71%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

< 국내 정보통신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('02년) >



- (정보이용 측면) 정보통신 이용측면에서도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점유
 -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: 세계 1위, 1,040만명('02년)
 - 인터넷 이용률 : 아이슬란드,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('02년)
 - 디지털접근 지수(ITU, '03.11) : 세계 4위

☞ 전국의 모든 지역이 문고루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제도적 기반 구축

○ 지방자치의 강화
○ 주민투표제 도입, 자치경찰제도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

○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, 지방재원의 자율성을 확대

□ 「지방분권특별법」 : 지방의 자용과 책임 강화

○ 서울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식의 대전환 가능
○ 위크가 형성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

○ 인구 50만명 규모의 정치·행정도시 건설로 전국적인 네트워크

□ 「신해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」 : 균형발전 선도 도시 건설

○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설치 : 지자체의 “지역혁신발전계획”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

○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: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 하고 지역 문화·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나후지역을 개발

○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: 지자체, 대학, 기업, NGO, 지역연륜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내생적 발전의 기를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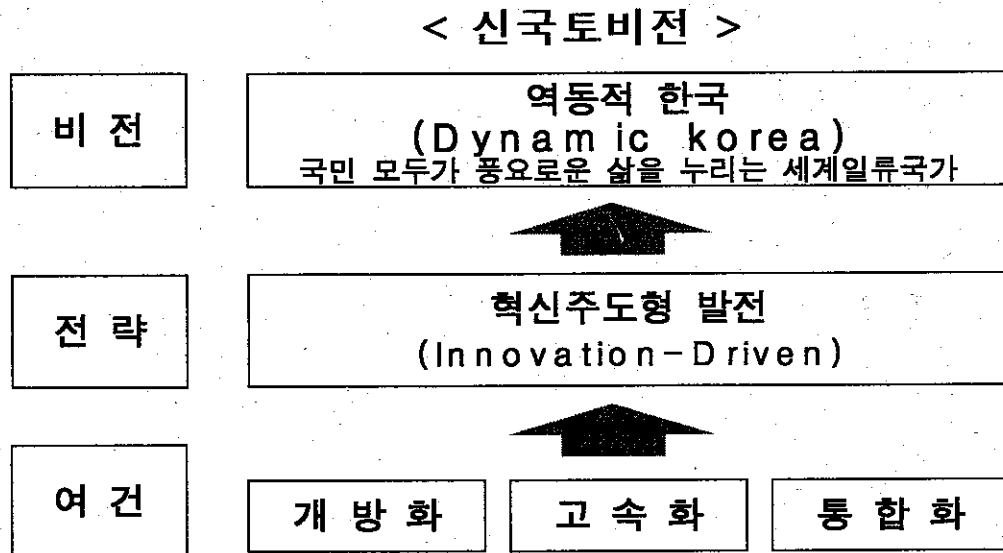
□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: 상생발전과 자립적 지방화의 제도적 토대 마련

4.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

Ⅲ

신국토비전 :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

- 개방화된 국토, 고속화된 국토, 상생·통합의 국토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어 역동적 한국(Dynamic Korea)을 건설



- 신국토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토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할 「신국토 패러다임」이 필요
- 국가 주도의 양적 성장 → 지역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
 - 지역간 연계없이 획일화되고 단절적인 성장 →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특성화된 발전을 하면서 지역간에 연계발전
 - 수도권 중심의 일극집중 국토구조 → 균형발전을 통한 다핵·분산형 국토구조
 - 개발위주의 성장 →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관리
 - 편협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내적 시각 →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시각

《 5대 전략 》	
① 혁신형 국토 구축 ○ 지자체, 대학, 기업, NGO, 언론 등 혁신 주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전략 산업 육성 ○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, 동산여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	
② 다핵형 국토 건설 ○ 실행정수도 건설,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산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○ 연안국토축 및 접경지역의 광역적 개발 및 관광거점 개발 ○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추진	
③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○ 지역내 산·학·연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간·국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○ 조고속 교통·정보통신망 등 SOC 확충	
④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○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이용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○ “선계획-후개발” 기조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	
⑤ 큰로별형 국토 경영 ○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조국경제 국토경영과 동북아 분업체계 구축 등 상생발전구도 정착 ○ 남북철도 및 대북철도 연결, 국제공항·항만 확충, 개방거점 육성, 외자유치 확대	

1. 혁신형 국토 구축

(1) 우리의 현주소 : 「저기술-저혁신」의 산업구조

□ 지난 '95년부터 1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정체상태

○ 기술모방, 물량확대위주의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“저기술-저혁신”의 함정에 빠져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에 실패

○ 선진국들은 혁신형 국가로의 개혁을 통해 10년 내외의 기간에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시대로 진입하였음

※ 일본 '81→'87(6년), 노르웨이 '78→'87(9년), 캐나다 '80→'89(9년), 영국 '87→'96(9년), 미국 '78→'88(10년), 독일 '78→'91(1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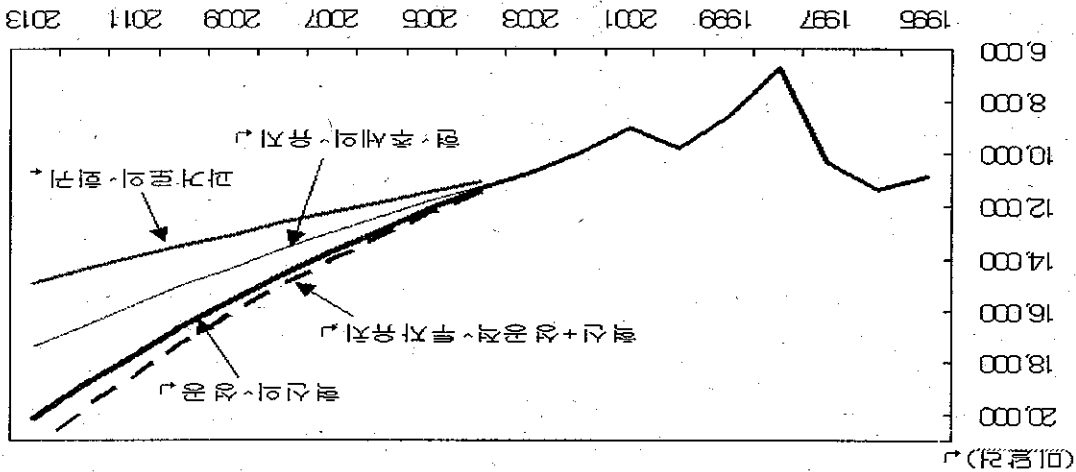
□ 반면, 우리나라는 아직도 생산성이 낮은 요소투입형(Input-driven) 성장전략을 유지

○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선진국의 50%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낮은 생산성 시현

※ 각국 생산성 비교 ('98): 미국 100, 프랑스 80, 일본 70, 한국 50

○ 최근 들어 GDP대비 R&D투자는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,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질적인 역량은 매우 미흡

※ 기술수지/GDP(% , '01) : 한국 -0.6, 영국 0.6, 미국 0.2, 일본 0.1



< 시나리오별 향후 10년간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>

⇒ 연평균 6.6% 성장, '12년 20,000를

돌아쳐 10년후 3%대에 도달할 경우

성공과 함께 2002년의 FDI가 GDP의 0.4%(02년)에서 점차
□ 시나리오 4(혁신 성공 + 외국인직접투자 유치) 혁신

⇒ 연평균 6.4% 성장, '12년 19,100를, 2만를 달성 '13년

생산성증가 속도가 현재보다 1%p 정도 빨라지는 경우

□ 시나리오 3(혁신의 성공) 국가 전체의 시스템 혁신이 성공하여

⇒ 연평균 4.9% 성장, '12년 16,800를, 2만를 달성 '16년

투자율과 기술력 증가속도가 1990~97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

□ 시나리오 2(원주세 유지) 혁신이 일정 정도 성공하여

달성 '24년

⇒ 향후 10년간 연평균 3.4% 성장, '12년 14,800를, 2만를

미국과의 기술격차가 현재 수준(약 1/2)으로 유지될 경우

□ 시나리오 1(과거 개발시대 패러다임 회귀) 혁신실패로

(2) 기포에 선 한국 경제 : 시나리오별 검토

(3) 한국형 지역혁신체계(RIS)의 구축

□ (필요성)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

- 특히 급속한 기술변화와 경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긴밀한 상호연계와 협력이 중요

□ (목표) 지역혁신체계는 지자체, 대학, 기업, 주민, NGO, 언론 등의 혁신주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

- 공동학습,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으로 지역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

□ (추진방향) 지자체, 대학, 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와 중앙정부 간의 수직적, 의존적 관계보다는 혁신주체간 수평적 관계를 강화

- 종전에는 지자체, 대학, 기업간의 연계가 약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관계만 중요시되어 자생적 혁신능력 취약
- 앞으로는 지자체, 기업, 대학간의 수평적·협력적 관계를 강화시키고, 중앙정부는 지원적·간접적 관계로 전환

※ '90년대 후반 OECD도 집적과 네트워크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

- 지역별로 혁신 클러스터의 주된 목표는 “생산성 및 지역 경쟁력의 획기적 향상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,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음

□ 혁신 클러스터의 목표

※ 해외 선진 클러스터 : 바이오 클러스터(미국 샌디에고), 북유럽의 IT 클러스터(이스타, 오슬로), 중국의 심리곤밸리(중관춘), 자동차 클러스터(일본 도요타시), 디지털 산업클러스터(이태리 카르피, 시수르로)

- 혁신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기능과 연구기능이 첨가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함

□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: 생산기능과 연구기능의 첨가

- 또한, 혁신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장비지원, R&D 지원(주관형 R&D), 경영 및 기술지도, 인력양성, 교류공간 제공 등 종합적인 인프라(Public Good) 지원이 필요

- 특히,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확산,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등이 중요

-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·재정·기술적 지원이 필수적

□ 개념

(4)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

(5)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 추진

□ 현재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중추기로서 전체 제조업체 수의 27.3%, 종업원의 37.6%, 생산액의 49.2%, 수출액의 71.6%를 담당

○ 현재 전국에 523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(국가 35, 지방 173, 농공 315개), 전체 공장용지의 55%를 공급

※ 국가산업단지는 207조원의 생산과 794억불의 수출을 담당, 지방산업 단지는 80조원의 생산과 294억불의 수출을 담당

□ 그러나, 단순 조립·제조 위주로 되어 있고 R&D 등 연구 기능과 산학연계가 부족하여 혁신 능력이 미흡

○ 반면에,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제품화할 수 있는 생산기능이 부족

□ 산업단지의 잠재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화 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

○ 생산공단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, 대덕연구단지는 벤처기업 등 첨단생산기능을 강화

○ 아울러,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

- 공동장비센터, R&D지원센터, 경영·기술지원센터, 인력 양성·알선 센터, Cafe 등 만남의 공간 등

※ 사례 : 한국산업기술대는 시화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장비지원, 기술 개발과 이전,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

구	주요 전략산업(예시)	주요 전략산업(예시)
부	금융, 국제업무	금융, 국제업무
대	물류, 부품·소재	물류, 부품·소재
구	섬유, 전자	섬유, 전자
인	화학물류, 바이오	화학물류, 바이오
관	문화, 관광산업	문화, 관광산업
대	통신기기, 반도체	통신기기, 반도체
물	자동차, 유화	자동차, 유화
경	전자, IT	전자, IT
강	관광, 건강	관광, 건강
충	바이오, IT	바이오, IT
충	디스플레이, 정밀화학	디스플레이, 정밀화학
전	자동차, 기계	자동차, 기계
전	생물, 물류	생물, 물류
경	전자, 신소재	전자, 신소재
경	정밀기계, 조선	정밀기계, 조선
제	관공, 생물	관공, 생물

< 지역별 주요 전략산업(예시) >

○ 지역의 산업집적 현황과 혁신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하고,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

□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성장유망산업을 특화·육성할 필요

(6) 지역별 주요 전략산업의 육성

(7) 농산어촌 지역의 혁신 추진

□ 주5일 근무제 시행, 자연지향의 가치관 및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**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**

○ 5일은 도시, 2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‘5都 2村’의 **생활패턴이 확산될 전망**

○ 휴양, 레저 등 여가활동에 가족단위의 참여가 늘어나고, 체험형 활동에 대한 수요가 **증대될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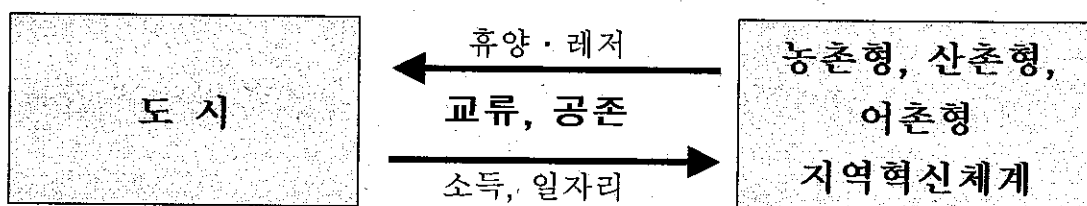
□ 이러한 변화는 **도농간 화해와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**시키고 **농산어촌지역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제공**

○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향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, “떠나는 농촌, 비어가는 농촌”에서 “**돌아오는 농촌, 머무는 농촌**”으로 탈바꿈

○ 이를 위해 지자체, 향토기업, 단위조합, 초중고교, 인근 대학 등의 **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**

※ 예) 남원의 목공예, 이천의 도자기, 금산의 인삼클러스터 등

○ 아울러, ①전원주택, ②농사체험, ③휴양·문화·레저·스포츠, ④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되는 5도 2촌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진하여 **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**



(1) 실행정수도의 건설

2. 다해형 국토 건설

- 응청권에 인구 50만 규모의 실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써
문화·문산형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

-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2~3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여
행정수도를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이 가능

※ 전국적으로 연간 약 1.1조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

- 수도권으로의 “권력집중”→“경제력 집중”→“인구집중”의
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지역이 자체적
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

- 따라서, 중앙정부가 출산수범하여 이전함으로써 관련
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적극 유도할 필요

- 국토공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, 서울 중심적 가치관의
원래 편향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

- 지역주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
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촉진

- ☞ 2004년 하반기에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에 착공하여
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

(2) 공공기관의 지방이전

-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질적 혁신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필요
 - 시장원리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은 자발적 판단에 맡기고 정부의지가 작용하는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이전
- 또한,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의 고용증가,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의 선도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
 -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방고용 증가와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
 - 연구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방대학의 연구능력이 향상되고, 산·학·연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
- 공공기관 이전과 아울러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적극 지원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도모

<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>

-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집단화 이전하여 클러스터 형성 촉진
- 지자체, 이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
- '04년부터 착수, 단계적 이전 추진

(3) 광역개발벨트 및 관광거점 개발

- ☐ 환동해, 환황해, 환태평양 경제권에 대응하여 동·서·남해안 벨트를 조성

- 남해안 벨트 :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

- 서해안 벨트 : 환황해경제권의 생산·교류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정주 및 해양관광기반을 조성

- 동해안 벨트(Peace Sea) : 환동해국토축을 형성하고 동북아 교류의 지역거점을 확보

- ☐ 동·서·남해안 벨트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벨트를 조성

-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, 경의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사업 등과 연계하여 남북교류 거점을 조성

- ☐ 10대 관광거점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육성하고 북한 휴양레저단지 개발을 추진

- 정부북부 유교문화권, 지리산권 광역관광거점 개발

- 제주, 인천, 안동, 부산, 광주, 설악권, 경주, 부여·공주, 새만금 등의 관광거점도시 육성

- 지역별 여건에 따른 복합 휴양레저 테마파크를 조성

※ 현재 국회계류중인 “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” 제정을 적극 추진

(4) 수도권 계획적 관리

□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토대로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북아와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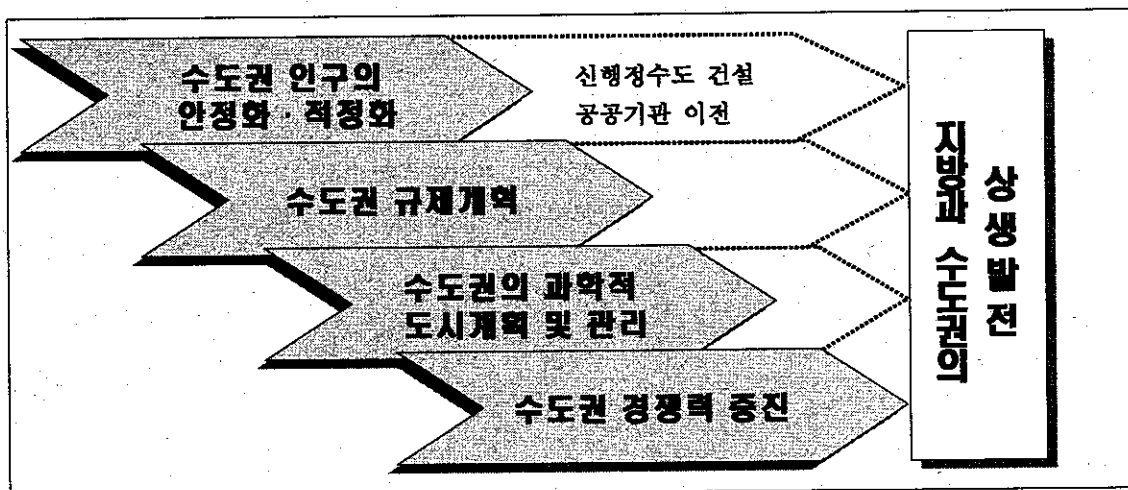
- 서울은 금융·국제업무 등의 세계도시로 육성
- 인천은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,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
- 경기도는 전자·IT 등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

→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차원의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과도 상생적 협력체계를 구축

□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,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 도모

- 신행정수도 건설,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
-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수도권 규제를 개혁
- 수도권의 삶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

< 수도권 계획적 관리 모델 : 시차별 연동화 >



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만 강화

☐ 선리코멘터리 등 미국·유럽·중국·일본의 세계적인 클러스터

○ 클러스터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공동협력 수혜를 지체간의 공동협력을 강화

○ 클러스터 통합정보망(e-cluster) 및 연계도로만 확충과 함께 통합플랫폼 구성, 공동 R&D 및 전략산업의 IT화 지원

☐ 클러스터간의 연계도 강화하여 클러스터의 혁신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

○ 테크노 파크, 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내 산학연 협력의 증대기관 확충

○ 산학협력대학 지원, 대학생의 원장원들 강화 등 기업과 대학의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

클러스터 형성

☐ 기업·대학·연구·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지역내

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토 전체를 네트워크화하고
국제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

(1) 국내의 혁신네트워크 강화

3.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

(2) 네트워크형 국토 건설을 위한 SOC 확충

전 국토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교통망, 정보통신망 등 SOC를 차질없이 확충

□ 신행정수도 건설,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국토 동서축 및 동해안축 등의 연계도로망 확충 추진

- 서해안, 천안-논산, 경부, 중부내륙 고속도로 등 신행정수도 동서에 위치한 고속도로들을 횡으로 연결하는 교통망
- 중부내륙 미개통구간인 충주-상주간, 충주-삼척간(동서 4축), 안동-영덕(동서 6축), 문경-울진(동서 4축) 점촌-청원-신행정수도 교통망, 동해안(남북 7축) 등

□ 공항, 항만, 철도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

-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연결 공항철도 건설
- 인천항 시설을 확충하고 부산신항, 광양항 및 평택항 등 기간항만의 확충을 추진하면서 지방항만 건설을 지원
-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고속철도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기존 철도의 전철화, 복선화, 신규 철도 건설 등을 추진

○ 조세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

□ 토지의 공익기능을 강화

○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과 적정수질을 확보하고 대기질을 개선

○ 산, 하천, 연안을 연계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며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

○ 조화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

○ 산업단지, 사회인프라, 관광 등 지역개발사업이 환경과

□ 생태계 보전과 개발을 통합한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구축

○ 확보하고 자원절약형 주거문화를 형성

○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내 생태 및 친수공간을

한 곳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

○ 전 국토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할 곳과 개발

단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

□ “선계획-후개발” 원칙하에 질서있는 토지이용으로 국토의

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관리를 통해 다음 세대도 쾌적하게
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

4.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

5. 글로벌형 국토 경영

(1) 남북 교통망 연결 등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기반 마련

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한 초국경적 국토경영

□ 남북교통망 연결을 토대로 TCR, TSR, TMR, TMGR과 연결을 추진하여 유라시아 진출기반을 마련

- 현재 한반도 종단철도(TKR)와 시베리아 횡단철도(TSR) 연결을 위한 남·북·러 3자 협의가 진행 중

※ TCR(중국횡단, 중국-로테르담, 10,514km), TSR(시베리아 횡단, 모스크바-블라디보스톡, 11,061km), TMR(만주횡단, 자바이칼-블라디보스톡, 9,346km), TMGR(몽고횡단, 단둥-울란바토르-TSR-모스크바-파리, 8,990k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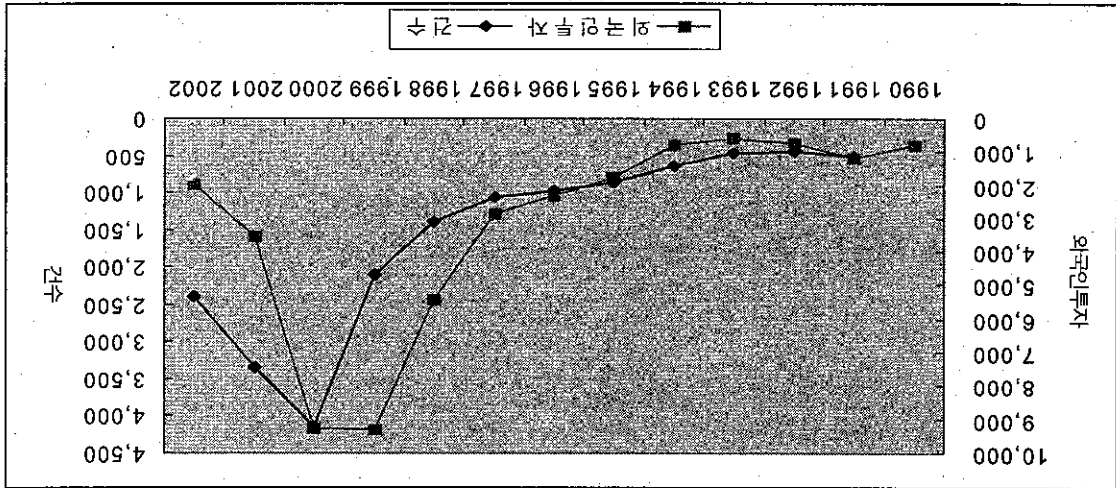
□ 남북간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

- 우선 경의선, 동해선 연결 후 기존시설로 소규모 운송 추진
- 동북아 국가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륙철도 연결

□ 동북아 국가간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

- 동북아 철도망구축 타당성조사 실시와 함께 「동북아철도협의회」 구성을 추진
- 「동북아철도장관회의」 개최 등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,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을 지원 추진

자료: UNCTAD, World Investment Report, 2003



> 외국인투자 총이 (단위: 백만달러, 건)

□ 그러나, 최근 외국인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 ('99~'01년 GDP 비중이 0.483으로 140개국 중 92위)

→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 유도

○ 제주 국제자유도시, 자유무역지역(마산, 여산, 대불, 군산 등) 개발

○ 경제자유구역 : 인천 송도 · 영종 · 청라지구('03.8.5 지정) 부산 · 진해, 광양만('03.10.24 지정)

□ 외국인 투자유치는 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방경제 거점으로 육성하여 중점 추진

지역경제거점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국제 경쟁력 강화

(2) 외국인투자를 위한 글로벌형 국토거점 개발

□ (인센티브 강화)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

- 외국 기업의 신·증설 투자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현금지원제도(Cash Grant)를 금년부터 도입

※ 대상 : 첨단산업 1천만달러, 연구·개발 500만달러 이상투자

-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등 조세제도개편
-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임대료 전액 감면

□ (환경개선) 노사안정과 외국인기업 경영환경 및 교육·의료 등 생활환경을 개선

- 외국기업 노사분규 전담자 지정제도 도입 및 금융·외환 분야의 경영환경을 대폭 개선
-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학교를 설립

※ 예시 : 판교신도시, 경남 진사공단 등

-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사항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Invest KOREA Plaza」를 건립

□ (서비스 강화 등) One-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외자유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투자유치를 장려

- 투자검토에서 최종투자까지 One-Stop 서비스를 위해 PM(Project Manager) 제도 도입 등

- 국제물류 전문기업은 유지하고 전문인력을 육성
- 외국의 물류포용기관과 연계하여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, 물류도시내 대학을 물류특성화대학으로 육성
- 학만연수원을 학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등 학만기능인력양성

- 학만공영을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수요자 위주의 민간기업 경영형으로 전환하고 물류통합정보망을 조기에 구축
- 하는 종합물류단지를 조성

-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배후에 생산, 유통, 무역 등을 포괄 미·구축을 연결하는 대륙형 중계기지로 개발('11년까지 63선석)
- 부산신항·광양항의 조기 확충 및 연계 강화 : 동북아와 □ 이에 대비하여 신국제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

- 세계 4대 다국적 물류기업(FedEx, UPS, DHL, TNT)도 이미 중국에 진출
- 2020년 중국 양산항 완공 후 상해항은 처리능력이 현 부산항의 3배인 2,200만TEU로 세계최대 항만으로 부상할 전망

상해항의 급부상에 대비한 동북아 물류중심 학만 육성

(3) 신국제 해상물류시스템 구축

(4) 상생적 국제분업 추진과 주도권 확보

한 · 중 · 일간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이익 극대화

□ EU의 형성과정을 참고하여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조성하는 선도역할을 주도

- ‘실용적 분야’를 선정하여 수직적 · 수평적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
-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려 지역 생산 · 연구개발 체제 구축이 필요

□ IT강국으로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가혁신을 통한 기술 및 초일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면 주도권 확보 가능

- 우선적으로 IT산업과 자동차산업 부문 등에서 협력적 분업 체계를 강화해 가면서 점차 확대
 - 일본 : 원천기술 개발(동경, 쓰꾸바 등)
 - 한국 : R&D, 디자인, 부품(울산, 전주, 구미, 천안 등)
 - 중국 : 생산(북경, 상해, 광둥 등)

<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부품수출 증가 추세 >

구 분	‘99	‘00	‘01	‘02	‘03
수출(억불)	73	101	96	126	197
수지(억불)	32	47	43	54	111

※ 자료 : 산업자원부

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발전방안을 구체화
폭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창출하는 신국토 형성의 열쇠

우선적으로 지원

○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R&D, 인프라, 예산 등을

- 광역별로 주력산업을 특성화하고, 지자체간에는 공동 사업
발론을 통해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

공동 체계를 강화

○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, 지역과 지역간 상호협력 및 역할

□ (추진방향)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공동체계를 구축
하고, 이를 토대로 지역간 연계 발전을 적극 추진

→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,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도 어려움
뿐만 아니라 혁신형 국토 형성도 불가능

진출을 중시

○ 반면, 수도권은 지방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동북아 등 해외

○ 지방은 수도권에 의존적이고 대외연계도 매우 취약

□ (현황) 지방과 수도권간의 연계가 약하여 혁신능력 미흡

1. 기본방향

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간 연계발전 : 지역간
협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

V

2. 부문별 연계발전 방안

(1) 산업부문의 연계발전방안

□ 지역별로 특성과 비교우위를 살려 전자산업의 세부 업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**전국차원의 분업체계를 구축**

- 경기(반도체, IT), 경북(통신기기, 전자관), 인천(전자부품), 광주(광산업), 대전(전자기기), 강원(의료기기) 등

□ 산업간 전후방 효과 등 연관성을 고려하여 협력을 강화 (전자산업 예시)

- 천안·아산, 대전과 수도권 지역 : 정보기기분야에서의 공동 R&D 추진 및 인력교류
- 광주, 수도권 : 광산업과 반도체·LCD산업간의 기술교류 등
- 마산, 구미 : 전자정보기기(스마트 홈) 산업과 디스플레이·가전 산업간의 공동 R&D 추진 및 기술협력 등

◇ 유사한 업종간에는 **지리적 근접성을 활용**하여 인력 및 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

- 수도권(기계산업), 부산·경남권(자동차, 조선, 기계산업), 대구·경북권(부품·소재산업), 대전·충청권(IT, BT산업), 호남권(BT산업) 등

※ 한동대의 국내유일 국제변동물류대학원과의 공동교육과정의 학점교류 추진

학대의 타지민화를 받기

※ 동산대와 고려대간에는 학점교류 등을 통해 지방학세의 교육기회

○ 동산대-고려대, 한동대-서원대 : 학생·교수 교류 추진

□ 교육 프로그램 공동공영을 통한 공동발전 도모(예시)

(법라인)에 공동투자 및 연구 진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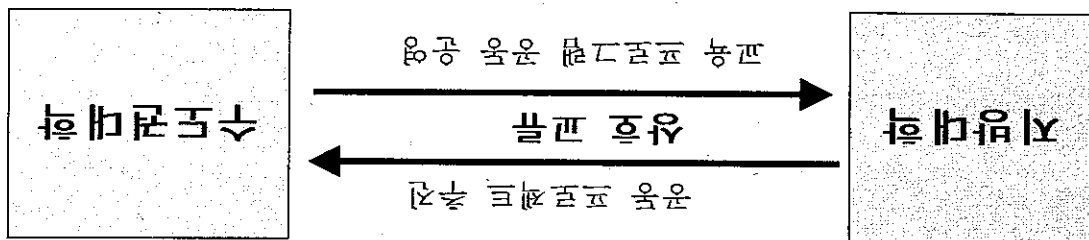
○ 포항공단-연세대-광주 KAIST 등 : 포항공단 방사광 가속기

국제특허로 출원

※ 서울대, 충북대, 전남대 등 7개 대학의 120여명이 참여하여 3년간에 걸쳐 세계 최초로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개발하고, 그 결과를

○ 서울대-충북대-전남대 등 : 광우병 내성 소 품종 연구

□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R&D역량 강화 및 신기술 개발(예시)



< 개념도 >

□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교류협력을 확대

(2) 교육부문의 지역간 연계발전방안

(3) 문화산업의 지역간 연계발전방안

□ 지역별로 10대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

- 서울(문화산업 전반), 경기(애니메이션, 캐릭터, 출판문화), 춘천(애니메이션), 청주(학습, 게임), 대전(영상, 게임), 전주(디지털 영상, 소리문화), 부산(영화), 대구(모바일콘텐츠), 광주(디자인, 캐릭터, 영상), 경주(가상현실)

- 지역대학 중심으로 산학연계를 강화하고 산업현장 수요형 인력을 양성·공급

- 민관협력 공동 투자펀드 조성 및 산업지원 등

□ 클러스터간 협력 및 기술·인력 교류확대 방안(예시)

- 춘천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부천에서 만화로 상품화
- 경주의 가상현실 기술을 대구의 모바일콘텐츠 개발에 활용
- 대전의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부산에서 상영·유통
- 제주에서 개발한 뷰티 콘텐츠를 서울에서 상용화

○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선도

으로 참여하고 혁신 아이디어 상호 교환

○ 지역혁신협의회(지자체·대학·기업·NGO·연문)에 자발적

□ 민간부문은 지역혁신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

○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원 등을 통하여 혁신활동을 활성화

○ 주체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역량을
강화하고 개방의식을 토대로 자기혁신 노력 지속

□ 지자체는 기획 및 혁신촉진 기능을 담당

○ 정부투자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활용

및 사업의 중복을 조정

○ 전국적 차원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지역간·주체간 갈등

○ 중앙권한 및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강화

□ 중앙정부는 지원과 조정기능을 담당

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하고
다양한 주체가 협력

(4) 지방분권을 통한 3자간 파트너십 체계 구축

VI

신국토의 미래 모습 : 우리는 어떤 국토에 살게 될 것인가

◇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가는 Dynamic Korea 구현

- 남해안·서해안·동해안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π 형 국토축 형성(유라시아, 환태평양 진출의 관문)
- 신행정수도 건설과 권역별로 특성화된 네트워크 국토축
- ☞ 세계로 향한 21세기 「다이나믹 코리아」의 대항해를 상징하는 신국토 골격을 구비

□ 혁신 성공시 2012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202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달성 가능

- 향후 10년간 연평균 6.6%의 성장을 실현하여 2012년에 2만불 달성 가능
- 2020년에는 33,000불(G7 수준)의 소득 달성 가능

□ 외국인 직접투자비율도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고비용 구조도 해소

-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5%대로 향상
 - ※ 네덜란드 6.8%('02년), 싱가포르 7.0, 벨기에 8.0, 아일랜드 20.2
- GDP대비 물류비용 비율도 현재의 12.5%에서 9%대로 하락
 - ※ 미국 10.2%('00년), 일본 9.6 ('00년)

☞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우리국토의 잠재력과 대외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명실상부한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

구분	전략	내용
1	혁신형 국토 구축	○ 지자체, 대학, 기업, NGO, 언론 등 혁신주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○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, 동산여중형 지역혁신체계 구축
2	다핵형 국토 건설	○ 신행정수도 건설,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문산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○ 연안국토축과 접경지역의 광역적 개발 및 관광역 개발 ○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추진
3	네트워크형 국토 형성	○ 지역내 산·학·연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간·국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○ 중고속 교통·정보통신망 등 SOC 확충
4	지속가능형 국토 관리	○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이용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○ “선계획-후개발” 기조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
5	글로벌형 국토 경영	○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중국경제권 북부와 동북아 기업체제 구축 등 상생 발전구도 정착 ○ 남북철도 및 대북철도 연결, 국제공항·항만 확충, 개방거점 육성, 외자유치 확대

(1) 신국토구상 5대 전략

신국토구상 5대 전략·7대 과제

부록

(2) 신국토구상 7대 과제

과 제	내 용	주요 관련부처
1.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 발전 추진	○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('04~) ○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간 연계발전방안 마련('04. 4 계획수립, '04.12 방안마련) ○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육성('04하 추진)	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문광부 재정부
2.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	○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계획수립('04.6) 및 시범사업 추진('05부터) ○ R&D특구 지정 및 육성('04.12) ○ 산업혁신을 위한 대학역량 확충 및 인력양성('04~)	산자부 건교부 과기부 교육부
3. 농·산·어촌의 혁신	○ 농·산·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('04~) ○ 5都2村형 사업의 추진('04~)	농림부 행자부 건교부 해양부
4.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	○ 신행정수도 건설('07 착공) ○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('04~) ○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동서간 도로 등 교통·통신체계 정비('04~) ○ 고속철도 건설 역세권 개발 및 수혜지역 확대('04~)	건교부 정통부
5. 친환경적 국토관리	○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('04~) ○ 생태축 보전계획 수립 및 국토환경성평가 체제강화('05~'06)	환경부 건교부
6. 개방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 벨트 조성	○ 인천공항, 부산신항, 광양항 등 조기확충('04~) ○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 확충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('04~) ○ 연안국토축 및 접경지역 광역개발('05~'07) ○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레저휴양단지, 테마파크 개발('04~)	해양부 산자부 재정부 문광부 건교부
7.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	○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('04.12) ○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('04.12)	건교부